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과세관청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취디* · 토국후 간치맥**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 관점에서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납세자로 하여금 반드시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측정하였고,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조세법에 따라 세무행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활용하여 2016년에 1051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실시된 149가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자료 중에서 세금에 대한 설문문항을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세관청의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법과 규제 준수 인식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인식을 택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납부한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인식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인식을 높게 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과 규제 준수 높게 인식할수록 법에 따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납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납부한 세금이 잘 내리는 결과는 높았다.

<주제어> 관세관청의 징세권 행사, 세무행정, 소득 격차, 사회복지

논문투고일 : 2023. 11. 3. 1차 수정일 : 2023. 12. 26. 게재확정일 : 2023. 12. 29.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 제1저자(brittany@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 교신저자(ganchimeg@seoultech.ac.kr)

I. 서 론

조세라는 용어는 토지에 대한 과세로부터 유래한다. 조는 경작자가 도조와 같이 수확의 일부를 전주(토지소유자)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세는 전주가 경작자로부터 받은 조의 일부를 국가에 바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조세²⁾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성장 등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된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건실한 재정운용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조세의 개념은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조세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제반 기능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이다. 정부는 국민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교육, 사회복지(공공부조) 및 사회 구축 등의 재정활동(사업)을 하며, 그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 징수되는 대표적인 것이 조세이다.

둘째, 국민의 부나 소득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정부에 이전하는 수단은 조세이다. 조세는 국민(주민)의 부나 소득의 일부를 과세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정부에 귀속시키는 이전수단으로 정부만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방적, 권력적 과징금의 성질(강제성)을 가진 조세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적 성격을 띄고 있어 근대국가 이후 조세의 부과 징수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지켜져 오고 있다.

셋째, 반대급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세이다. 국민은 부담한 조세에 의해 정부로부터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이는 대가관계가 간접적인 일반보상으로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의한 개별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넷째, 금전급부는 조세이다. 화폐경제시대 이전에는 물납의 상납, 노역 등의 제공에 의해 조세를 부담하였으나, 오늘날의 세제에 있어서는 금전납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세금이 재산 등의 사용가치를 얻는 것이 아니고 금전적 교환가치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조세를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의 연령, 부양가족, 결혼여부 등 인적사정을 고려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한다. 인세는 납세의무자 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하여 납세능력을 조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그러나 물세는 거래자나 소유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매, 판매, 재산보유 등의 활동 또는 목적물에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소득세·상속세는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한 각종 공제가 인정되어 인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므로 물세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세의 과세대상

2)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조세개요

소득인 이자, 배당 등이 분리 과세되는 경우와 같이 물세적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분리 과세되는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이자소득자의 소득은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과 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 급부지만 조세는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고³⁾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정부의 세무행정과 같은 조세제도 운영과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또한 초과 부담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행정비용은 정부가 조세를 부과 징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게 되고, 납세협력비용 역시 정부의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의 비용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초과부담에 해당이다. 세무행정의 초과부담 감소는 세무행정조직의 합리적 정비, 능률제고, 세무공무원의 자질 제고 등이 해당, 납세자협력비용의 초과부담 감소는 조세학습비용과 과세자료 제출 등과 같은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줄임으로 달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 관점에서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납세자로 하여금 반드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측정하였고,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지위 등과 상관없이 조세법에 따라 세무행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한 인식수준으로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납세자 관점에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을 실증하는 연구이다. 먼저 이론적 배경이 되는 기존 문헌을 살펴보고자 실증분석을 위해 사용한 가설을 전개한다.

류태건과 차재권(2020)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뢰와 신뢰성은 서로 다른 현상이지만 용어의 사용과 논리 개발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연구에서 선정된 정부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시정과 구위원회의 행정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구위원회보다 시정의 신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요인은 공무원과 공

3) <https://www.nabo.go.kr/index.jsp>

공 기관의 거버넌스와 공공 정책의 신뢰도에서 공통적인 요소이다. 이는 세 가지 대상에 대한 신뢰의 대상인 시민의 공통 열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시민 및 지방정부, 특히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원인이며,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보다 이러한 신뢰성의 문제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적절하게 취급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의 무능력, 무능, 자의성은 정부 불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는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초이다.

강민조(2019)의 연구는 납세자 친화적 세금 관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가 세무관리 기관의 설계에 대한 정책 영향을 소개하는 것이고 납세자 친화적 세금 관리를 위해서는 납세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납세자 행동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국고는 세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 친화적 세무서이며 세금 친화적인 세무서에서는 모든 납세자가 적절한 세율을 지불하도록 한다. 청구서를 지불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세자 친화적 선진 세무행정을 구축한 선진 국세행정의 운영 방향은 효과성과 효율성 합치는 시스템, ICT 기술, 체계인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국세 행정기구의 설립은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행정을 지속할 수 있다. 세무분류와 기능에 따라 조직은 과거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납세자 친화적인 청소를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엄채욱과 이영환 (2018)은 응답자들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법인 전환 후 법인세 감면, 소득 감소 또는 세금감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법인 전환시 주로 직접적인 세금혜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원이 더욱 투명해지며 납세준수 수준이 높아지므로 법인전환은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인에 전환할 때 납세자들은 투자유치나 세금감면효과가 있다. 기업의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부동산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부담이 증가한다. 기업은 부가가치세 (VAT)로 인해 납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사업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세정책에 사용하는 것보다 개별적인 사업체에 일정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법인 이사 세납부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은 지급이 수락되고 이자가 지급되며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면 CEO의 보너스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법인으로 이전 비용이나 법인으로의 이전 후 새로운 형태의 과세는 무거운 부담이기 때문에 개별기업은 법인으로의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소한 상당한 세금공제를 제공해야 한다.

박기백 (2019)은 납세준수, 세금협력비용 및 납세협력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세무조사는 국세청 데이터,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세금회피 합리성 및 최적 세금관리모델을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유인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 제도, 성실납세 협약제도, 모범납세자 세정우대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세무당국은 조세 협력 인센티브 시스템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다. 각각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추가 실증

분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한계가 있었다. 세무당국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세무자료를 공개하여 학계에서 납세 인센티브 제도가 세무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직하게 보고하고 세무 관리 비용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란희와 이태형(2019)은 공동체 소속감과 정부신뢰가 사회적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지역공동체 소속감과 정부 신뢰의 효과가 사회적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공동체 소속감이 사회적 포용성에 미치는 과정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주장하고 있다.

유승희와 차희원(2019)은 설문응답자의 특성으로 인한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책PR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 이 연구는 전국지역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부분적으로 제한이 될 수 있다. 또한, 설문에 예시로 제시한 연구 대상으로 인한 한계이다. 정부가 정책PR 미디어로서 다양한 SNS를 다루고 있으나, 이 연구는 페이스북 페이지만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SNS 관련 선행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빈번하게 선정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신상준 등(2018)은 아시아 5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성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에 대한 인식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정부성과와의 관계에서 정부성과를 다양하게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이 연구는 정부신뢰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정부신뢰는 중앙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로 정의하였고, 독립변수인 경제적 성과와 정치적 성과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이 두 변수를 분리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정부성과 인식을 경제적·정치적 성과를 구분하여 정부신뢰에 상이한 영향관계를 미친다고 탐색적으로 확인하였음에도, 각 국가마다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못한 점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김지영과 김경아(2018)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며, 정부정책에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통해 국가의 미래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정책지식, 정부지출 및 공공서비스 자격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복지정책의 평등, 산업경제, 지원규제의 완화와 보호, 법규제와 정부지출 삭감, 예술문화, 환경·보건·치안·국방·교육, 공무원의 업무역량과 공직태도 등을 변수화하여 각각의 변수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역할과 공무원의 자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기업지원 감소, 기업보호요소 감소, 법률에 대한 정부지출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민과 최선미(2019)은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 지출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사회복지 비용을 높이려면 이를 지원

하고 공공의 합의를 보장할 재정 자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Odkhuu Khaltar 등(2019)은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의 역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국민의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이 국민이 인식하는 위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정부신뢰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가설설정

본 연구는 공정한 징세권 행사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신고납부토록 하는 것이며, 공정한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사회적 지위나 학연, 지연 등 관계와 상관없이 조세법에 따라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공정한 징세권 행사와 세무행정 수행에 대한 납세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사회경제적 요인은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성별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2. 연령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3. 학력수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4. 정규직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5.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1-6. 조세형평성인식 수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연구가설 2. 사회경제적 요인은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성별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2-2. 연령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2-3. 학력수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2-4. 정규직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2-5. 소득수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가설 2-6. 조세형평성인식 수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다.

Ⅲ. 실증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연구모형(1)을 통하여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연구모형(2)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 여부를 검증한다.

본 연구모형에서(Fair_Collection)는 종속변수에 관련된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미치는 영향을 아래 연구모형 식(1)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Fair_Collection = & \alpha_0 + \beta_1 Gender + \beta_2 Age + \beta_3 Education + \beta_4 Regular_Job \\
 & + \beta_5 Income + \beta_6 Tax_Equity + \beta_7 More_High_Incomer \\
 & + \beta_8 More_Welfare + \beta_9 More_JobCreation + \epsilon_{it}
 \end{aligned}
 \tag{1}$$

변수의 정의:

<i>Fair_Collection</i>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거의 항상 4, 자주 3, 때때로 2, 거의 없다 1)
<i>Gender</i>	여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Age</i>	연령
<i>Education</i>	무학자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6, 석사 졸업 7, 박사 졸업 8
<i>Regular_Job</i>	정규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Income</i>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공제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
<i>Tax_High</i>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i>Tax Equity</i>	<i>Tax_Middle</i>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i>Tax_Low</i>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i>More_High_Incomer</i>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5,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안된다 1
<i>More_Welfare</i>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매우 찬성 5, 다소 찬성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다소 반대 2, 매우 반대 1)
<i>More_Jobcreation</i>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매우지지 5, 다소지지 4, 지지도 반대도 아님 3, 다소 반대 2, 매우 반대 1)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모형은 식(2)과 같이 설정하였는데, (Fair_Administration)는 종속변수에 관련된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와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나머지 통제변수들의 미치는 영향을 아래 연구모형 식(2)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begin{aligned}
 \text{Fair_Collection} = & \alpha_0 + \beta_1 \text{Gender} + \beta_2 \text{Age} + \beta_3 \text{Education} + \beta_4 \text{Regular_Job} \\
 & + \beta_5 \text{Income} + \beta_6 \text{Tax_Equity} + \beta_7 \text{Tax_Avoidance} \\
 & + \beta_8 \text{More_High_Incomer} + \beta_9 \text{More_Welfare} \\
 & + \beta_{10} \text{More_JobCreation} + \epsilon_{it}
 \end{aligned}$$

식(2)

변수의 정의:

Fair_Administration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거의 항상 4, 자주 3, 때때로 2, 거의 없다 1)
Gender	여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Age	연령
Education	무학자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6, 석사 졸업 7, 박사 졸업 8
Regular_Job	정규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Income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공제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
Tax_High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Tax Equity	Tax_Middle
Tax_Low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Tax_Avoidance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More_High_Incomer	사기업의 세금회피를 위한 시도 (거의 항상 4, 자주 3, 때때로 2, 거의 없다 1)
More_Welfare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5,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안된다 1
More_Jobcreation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매우 찬성 5, 다소 찬성 4, 찬성도 반대도 아님 3, 다소 반대 2, 매우 반대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매우지지 5, 다소지지 4, 지지도 반대도 아님3, 다소 반대 2, 매우 반대 1)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변수를 사용하였다.

- 1) 종속변수 : 공정한 징세력 행사와 공정한 세무행정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과세관청과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과세관청의 공정한 징세력 행사(Fair_Collection)와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 (Fair_Administration) 변수를 1-4 까지 서열척도로서 다음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공정한 징세력 행사(Fair_Collection)변수는 과세관청이 사람들이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얼마나 자주 징세력을 행사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다음의 질문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당국은 얼마나 자주 다음의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람들이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함
(답변) 4. 거의 항상, 3. 자주, 2. 때때로, 1 거의 없다.

또한 공정한 세무행정(Fair_Administration) 변수는 과세관청이 사회에서의 지위나 그들의 연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법에 따라 얼마나 자주 다루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로 다음의 질문문항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당국은 얼마나 자주 다음의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에서의 지위나 그들의 연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법에 따라 다룸
(답변) 4. 거의 항상, 3. 자주, 2. 때때로, 1 거의 없다.

2) 독립변수 : 사회경제적 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서 크게 성별(Gender), 연령(Age), 학력수준(Education), 정규직여부(Regular Job), 소득수준(Income) 및 조세형평성 인식수준(Tax Equity)으로 정의하였다.

성별(Gender)은 설문응답자가 여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하였고 연령(Age)은 응답자의 연령이며 학력수준(Education)은 응답자의 최종학력이 무학자이 1, 초등학교 졸업이면 2, 중학교 졸업이면 3, 고등학교 졸업이면 4, 전문대학교 졸업이면 5, 대학교 졸업이면 6, 석사 졸업이면 7, 박사 졸업이면 8로 측정하였다.

또한 정규직 여부(Regular Job)는 재직 중인 직장에 정규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측정하였으며, 소득수준(Income)은 세전 월평균 총소득 금액의 자연로그 값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조세형평성 인식수준(Tax Equity)은 5점 척도로서 각각 고소득자(High), 중간소득자(Middle) 및 저소득자(Low)가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만큼인지를 다음과 같은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 한국의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세금이란 임금공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세금을 말합니다.
- 고소득자(High) :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 중간소득자(Middle) :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 저소득자(Low) :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은~
(답변)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3) 통제변수

사기업의 세금회피를 위한 시도(Tax_Avoidance) 변수는 주요 사기업들이 얼마나 자주 세금회피를 위한 시도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의 항상이면 4, 자주이면 3, 때때로이면 2, 거의 없으면 1로 측정하였다. 부유층에 대한 추가적 세부담 정도(More_High_Incomer)는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인식하면 5부터 더 거두면 안 된다 1까지의 5점 척도이며, 사회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정도(More_Welfare)는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찬성이면 5, 다소 찬성이면 4, 찬성도 반대도 아니면 3, 다소 반대이면 2, 매우 반대이면 1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가적인 세부담정도(More_Jobcreation)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지지이면 5, 다소 지지이면 4, 지지도 반대도 아니면 3, 다소 반대이면 2, 매우 반대이면 1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더십이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리더십이 조직 민첩성을 매개하여 디지털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디지털 리더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영향력과 가족기업에서 가족의 참여가 미치는 영향을 조절 효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신뢰성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판별 타당성 분석하였으며, 가설검정을 위하여 경로 분석, 매개 분석을 하였다. 조절 회귀분석을 하여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3. 표본 구성

본 연구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진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성균관대학교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SRC)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으로 진행하는 동아시아사회조사(EASS)의 항목이다. 이 조사는 전국 38개 대학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2016년에 1051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실시된 149가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된 자료 중에서 세금에 대한 설문문항을 발췌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시한 설문 조사에 들어 있는 136개의 문항에서 본 연구의 내용에 관련된 14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에 조세에 관련된 질문 7개, 작업에 관련된 질문 2개, 조세법에 대한 질문 2개, 월평균 총소득에 대한 질문, 응답자의 학력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24명은 대학교와 그 이상의 학력, 627명은 전문대학 학력보다 이하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서 사회층에 대한 질문, 참여자의 연령에 대한 질문 마지막으로 성별에 대한 질문들이 각각 있으나 여자는 576, 남자는 47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 자료에서 기준 수준에 닿지 않은 285개의 답변을 제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IV.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초기술통계량

<표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Fair_Collection)의 평균은 2.412로 중위수인 2보다 크게 나와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Fair_Administration)의 평균은 2.775로 중위수인 2보다 더 크게 나와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More_High_Incomer)의 평균은 1.86으로 중위수인 2보다 더 적게 나타나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5,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안된다 1 수준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5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정지원 (More_JobCreation)의 평균은 1.84로 중위수인 2보다 더 적게 나타나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답변의 매우 지지면 1 수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 (Tax_High)의 평균은 4.076로 중위수인 4와 비슷하고 약간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들의 답변은 매우 많다면 1 수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중간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 (Tax_Middle)의 평균은 2.88로 중위수인 3보다 적게 나타나 좌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들의 답변은 적당하다면 3 수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 (Tax_Low)의 평균은 2.44로 중위수인 2보다 크게 나와 우측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들이 다소 적다면 4로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의 성별을 의미하는 Gender의 평균은 54.8%로 나타났다. 연령을 나타내는 Age의 평균 49.5를 보이고 있는데, 학력은 (Education)을 나타내는 학력의 평균 약 4.54으로 100~800%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신 일을 의미하는 Regular_Job와 소득을 의미하는 Income의 각각 평균이 27.7%와 9.05였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	N	MEAN	SD	MIN	P25	P50	P75	MAX
Fair_Collection	1051	2.412	1.147	1	2	2	3	4
Fair_Administration	1051	2.775	1.305	1	2	2	4	4
More_High_Incomer	1050	1.859	1.043	1	1	2	2	5
More_JobCreation	1051	1.848	0.939	1	1	2	2	5
Tax_High	1051	4.076	1.122	1	4	4	5	5
Tax_Middle	1051	2.888	1.107	1	2	3	3	5
Tax_Low	1051	2.444	1.166	1	2	2	3	5
Gender	1051	0.548	0.498	0	0	1	1	1
Age	1051	1.695	1.27	1.255	1.531	1.69	1.806	1.996
Education	1050	4.541	1.701	1	4	5	6	8
Regular_Job	1051	0.278	0.448	0	0	0	1	1
Income	1051	9.055	6.358	0	4	8	12	22

주 1)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Fair_Collection :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거의 항상 4, 자주 3, 때때로 2, 거의 없다 1)
- Fair_Administration :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 (거의 항상 4, 자주 3, 때때로 2, 거의 없다 1)
- More_High_Incomer :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5,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면 안된다 1
- More_JobCreation :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정지원(매우지지 5, 다소지지 4, 지지도 반대도 아님 3, 다소 반대 2, 매우 반대 1)
- Tax_High :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면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 Tax_Middle : 중간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 Tax_Lower : 저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인식 (매우 많다 1, 다소 많다 2, 적당하다 3, 다소 적다 4, 매우 적다 5)
- Gender : 여성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Age : 연령
- Education : 무학자 1, 초등학교 졸업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학교 졸업 5, 대학교 졸업 6, 석사 졸업 7, 박사 졸업 8
- Regular_Job : 정규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Income :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공제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월

2. 상관관계 분석

<표 2>는 주요 변수들에 대한 상관관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Fair_Collection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Fair_Administration은 서로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의미하는 More_High_Incomer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Fair_Administration은 서로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보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More_JobCreation은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Fair_Collection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Fair_Administration,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More_High_Incomer은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올라갈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난다는 뜻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Tax_High은 Fair_Collection과 Fair_Administration은 10% 이하의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More_High_Incomer은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More_JobCreation은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내고 있다. 그리고 중간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Tax_Middle 모두 유의하지는 않지만 Fair_Collection과 Fair_Administration은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Tax_High은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Tax_Low은 More_High_Incomer과 Fair_Administration과 More_High_Incomer과 More_JobCreation은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Tax_High과 Tax_Middle는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성별을 의미하는 Gender은 More_JobCreation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연령을 의미하는 Age은 Fair_Collection과 Fair_Administration은 10% 이하의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Tax_High과 Tax_Middle는 10% 이하의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More_High_Incomer은 5% 이하의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Tax_Low은 1%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Gender은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학력을 의미하는 Education은 모두 유의하고 10% 이하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시는 일을 의미하는 Regular_Job는 Tax_Middle와 Gender과 Age는 10% 유의한 양(+이고, Tax_Low과 5% 유의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Education는 10% 유의한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의미하는 Income는 Fair_Collection과 Fair_Administration은 10%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업연구 제2권 제2호

<표 2> 상관관계 분석

	Fair_Collection	Fair_Administration	More_High_Incomer	More_JobCreation	Tax_High	Tax_Middle	Tax_Low	Gender	Age	Education	Regular_Job
Fair_Administration	0.507*										
More_High_Incomer	0.042	0.008***									
More_JobCreation	0.121*	0.151*	0.152*								
Tax_High	0.172*	0.256*	-0.190*	0.01***							
Tax_Middle	0.196*	0.225*	0.024	0.041	-0.426*						
Tax_Low	0.178*	0.148*	0.128*	0.127*	-0.121*	-0.412*					
Gender	0.043	0.058	-0.036	0.075*	-0.055	-0.026**	-0.046				
Age	0.082*	0.069*	0.016**	0.036	-0.107*	-0.075*	-0.01***	-0.102*			
Education	-0.109*	-0.123*	-0.03	-0.094*	0.073*	0.092*	0.007	0.164*	0.620*		
Regular_Job	-0.038	-0.047	-0.053	-0.024	0.027	0.069*	0.083**	0.145*	0.195*	-0.276*	
Income	-0.108*	-0.088*	0.026	-0.075*	0.114*	0.140*	0.033	0.073*	0.401*	-0.557*	-0.310*

주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1>의 주1)과 같음

3. 회귀분석

<표 3>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정부정책변수의 관련된 주요 관심 변수로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More_High_Incomer)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More_JobCreation)을 설명한다. 주요 관심 변수로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More_High_Incomer)의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09(p<0.001)$ 를 나타내며 이는 연구가설 1: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높게 할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할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될 거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지 못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More_JobCreation)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73(p<0.0001)$ 을 나타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높게 인식할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할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될 거라는 서로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높을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과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은 조세형의 관련된 변수들은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High)과 중간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Middle)과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Low)을 설명한다. Tax_High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0.099(p<0.0001)$ 를 나타내는데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과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서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증가할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Tax_Middle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0.044(p<0.0001)$ 를 나타냈다. 이는 중간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이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과 증가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x_Low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0.082(p<0.0001)$ 를 나타냄으로써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변수의 관련된 변수들은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Gender)와 학력 (Education)과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인 (Age)이다.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Gender)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39(p<0.001)$ 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 성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계변수의 학력 (Education)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통계적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41(p<0.001)$ 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세금을 잘 안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인 (Age)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6(p<0.001)$ 계수를 나타냈으면 이는 납세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잘 안내려는 경우 있다는 것이다.

경제변수의 관련된 변수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변수인 (Regular_Job)과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인 (Income)이다.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변수인 (Regular_Job)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0.077($p < 0.001$) 계수를 보이며,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인 (Income)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49($p < 0.001$) 계수를 나타냈으면 이는 납세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높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0.555	1.05	0.306
Intercept2	1.063***	492.93	<.0001
Intercept3	2.3	1072.47	<.0001
Gender	-0.039	0.3	0.583
Age	-0.06	0.29	0.59
Education	-0.041	2.06	0.151
Regular_Job	0.077	0.91	0.341
Income	-0.049	0.66	0.415
Tax_High	0.099***	7.66	0.006
Tax_Middle	0.044*	1.26	0.262
Tax_Low	0.081**	5.18	0.023
More_High_Incomer	-0.009	0.06	0.799
More_JobCreation	-0.073**	3.37	0.066
Log Likelihood	-1231.2		

주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1>을 참조

<표 4>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과세관청의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를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부정책변수의 관련된 변수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다 변수 (Tax_Welfare)와 법과 규제 준수를 나타내는 변수인 (Tax_Avoidance)이다.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다 변수 (Tax_Welfare)의 대한 결과를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0.029($p < 0.001$)로 나타나며 여가가설 2: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할수록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될 거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법과 규제 준수를 나타내는 변수인 (Tax_Avoidance)의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0.036($p < 0.001$) 나타

냈으면 연구가설 2: 법과 규제 준수가 높게 인식할수록 사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될 거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More_High_Incomer)의 회귀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음(-)의 $-0.012(p<0.001)$ 를 나타내며 이는 인식과 서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의미한다.

More_JobCreation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91(p<0.0001)$ 을 나타냈는데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서로 음(-)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형의 관련된 변수로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High)과 중간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 (Tax_Middle)과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Tax_Low)이다. Tax_High은 유의한 수준 $0.162(p<0.0001)$ 의 관계로 나타냈으면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 (Tax_Middle)과 저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인식 (Tax_Low)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0.052(p<0.001)$, $0.029(p<0.001)$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관련된 변수들은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Gender)와 학력 (Education) 과 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인 (Age)이다.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인 (Gender)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24(p<0.001)$ 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연령을 나타내는 변수인 (Age)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218(p<0.001)$ 계수를 나타냈으면 이는 납세자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잘 안내려는 경우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의 학력 (EDU)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58(p<0.0001)$ 로 나타냈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세금을 잘 안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변수의 관련된 변수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변수인 (Regular_Job)과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인 (Income)이다.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변수인 (Regular Job)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 $0.023(p<0.001)$ 계수를 보이며, 이는 납세자가 하신 일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으로 의미한다. 나머지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인 (Income)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 $-0.008(p<0.001)$ 계수를 나타냈으면 이는 납세자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잘 안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4>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Estimate	Chi-Square	Pr > ChiSq
Intercept	-1.553***	7.78	0.005
Intercept2	1.416***	575.17	<.0001
Intercept3	1.879***	868.05	<.0001
Intercept4	3.508***	905.36	<.0001
More_Welfare	0.029**	0.96	0.328
Tax_Avoidance	0.036	1.12	0.289
More_High_Incomer	-0.012	0.12	0.733
More_JobCreation	-0.091**	5.02	0.025
Tax_High	0.162***	20.29	<.0001
Tax_Middle	0.052	1.65	0.200
Tax_Low	0.029	0.65	0.422
Gender	-0.024	0.11	0.737
Age	-0.218*	3.77	0.052
Education	-0.058**	3.96	0.047
Regular_Job	0.023	0.08	0.782
Income	-0.008	0.02	0.892
Log Likelihood		-1244.3	

주1) ***, **,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변수의 정의는 <표1>을 참조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와 공평한 세무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려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정지원을 관심변수로 하여 성균관대학교와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 (SRC)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으로 진행하는

동아시아사회조사 (EASS)의 항목으로 2016년의 설문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과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과세관청의 징세권 행사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는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다는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양(+) 관계를 나타냈고,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할수록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도 높다는 것이며, 법과 규제 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자들과 중간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이 납부한 세금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계는 양(+)의 관계를 나타냈고, 납세자의 연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잘 안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학력도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잘 내리는 경향이 있다.

2.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도와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납부한 세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격차를 줄이려고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는 인식과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인식을 높게 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법과 규제 준수 높게 인식할수록 법에 따라 세무행정의 공통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다른 소득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셋째, 납세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납부한 세금이 잘 내리는 결과는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세금을 잘 내리는데 여기서 보면 납세자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납부한 세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류태건·차재권. 2020. “지방정부신뢰의 주요 정부요인: 대전광역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54권 제1호 : pp.111-141
- 강민조. 2019. “행동과학에 기초한 주요국의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및 정책시사점”. 「세무와회계」, pp.63-85
- 변정희·김상헌·심태섭. 2019. “회계 및 세무전공자의 성격유형이 전공교육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6권 제2호 : pp.49-80
- 엄채욱·이영환. 2018.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규정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8(1) : pp.111-134
- 박기백. 2019. “조세행정 측면에서 납세협력유인제도 효과 고찰- 성실신고확인제도 등 3개 제도를 중심으로”.
- 유란희·이태형. 2019. “공동체의 소속감은 사회적 포용성을 확대시키는가?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61-1381
- 차재권·류태건. 2018. “중앙/지방정부신뢰의 영향요인의 차이점- 대구광역시 사례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6(1) : pp.81-107
- 유승희·차희원. 2019. “SNS의 특성과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정부신뢰 및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 : 정책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광고학 연구」, 제30권 2호 : pp.105-132
- 손호중. 2020. “감성관리와 정부신뢰”.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4호 : pp.105-126
- 신상준·이숙중·김보미. 2018. “경제적정치적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의 탐색 아시아 5개국 국민들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1(3) : pp.109-142
- 김지영·김경아. 2018.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4호 : pp.405-425
- 문승민·최선미. 2019.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 : pp.289-316
- 정환만·김병일. 2017. “자금세탁 조세범죄의 국제적 동향과 그 전제범죄에 관한 연구”. 「조세학술논문집」, 33(3) : pp.319-351
- Odkhuu Khaltar·김태형·문명재. 2019.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리고 정부신뢰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5권 제1호 : pp.209-244
- 박홍규·신민호. 2014.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3호 : pp.3-21
- 고명철·이아람. 2019. “지방정부 신뢰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3) : pp.149-174
- 강혜진. 2018.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경제적 요인이 가족기업의 과세관청과 세무행정 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 pp.67-99
- 문승민·최선미. 2019.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에 따른 세금부담 의향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역량인식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25권 제3호 : pp.289-316
- 김학수·원종학·김빛마로. 2018. “R&D 조세지원제도의 세무행정 개선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 pp.61-67
- 최예나·김이수. 2019. “시민참여가 정책의제설정에서 문제흐름과 정책흐름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2) : pp.277-297
- 김정숙·정다정. 2019.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치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57권 제1호 : pp.67-92
- 서정우. 2018. “세무조사제도의 역사적 평가와 과제”. 「경영사연구」, 제33권 제3호 : pp. 23-42.
- 김우철·전병욱. 201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R&D 지원 내용 분석 연구”.
- 김태영·송성수·김기룡. 2017. “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 탐색 정부의 사회적 책임(GSR)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1(4) : pp.123-144

기타:

reformation of administration environment in taxation

<https://www.nabo.go.kr/>

www.taxforum.or.kr

www.riss.kr

www.naver.com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Factors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Tax Authority and Fair Tax Administration

QU, DI* · Togookhuu, Ganchimeg**

—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used a 2016 questionnaire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to see how it affects the level of perception of fair tax administration.

[Design/Methodology] For this study,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was used to extract questions on taxes from the data consisting of 149 survey questions on social issues conducted on 1,051 people in 2016 and use them for analysis.

[Findings] This study recognized that the higher the tax paid, the higher the effect on the exercise of collection rights and fair tax administration by the customs office. Taxes should be collected from the wealthy to close the income gap,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ew job creation projects, and tax to expand social welfare. More must be gathered, the recognition of the need and effectiveness of awareness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was chose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were high, but the results showed that it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perception of respondents that they must pay taxes and that they treat all people according to the law, regardless of their social status or connection. As a result, the impact on fair tax administration was not significant.

[Research implications] First, in order to increase taxes paid,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a tax system to raise awareness of the need to collect more taxes from the wealthy to reduce the burden on taxpayers and reduce the income gap, and to increase awareness of the need to collect more taxes to expand social welfare. Second, the higher the awareness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e higher the awareness of the commonality of tax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law. This is because the tax burden on income is higher than that on other income. Third, the older the taxpayer,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lower taxes paid. In addition, the higher the educational level, the better the tax rate, which suggests that the level of taxes paid can be increased only when sufficient taxpayer information is provided.

<Key Words> The Exercise of Collection Rights , Tax Administration, Income Gap, Social Welfare.

* Doctoral Candidat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Author

** Mas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